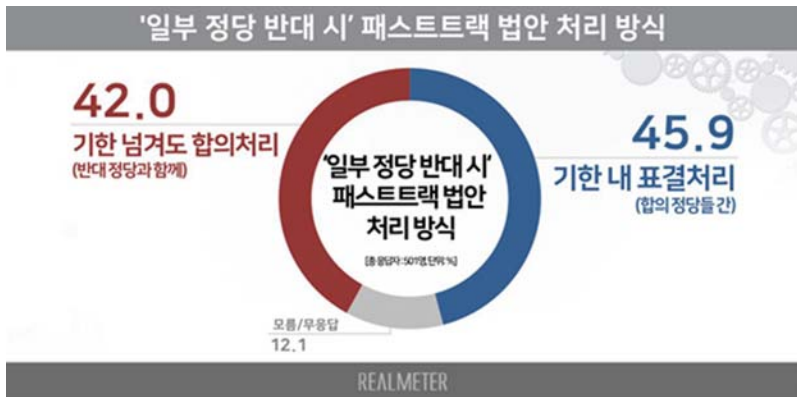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 “기한 내 표결처리” 45.9% “기한 넘겨도 합의처리” 42%

리얼미터 조사...중도층 다수 '기한 내 표결'로 기울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대해 일부 정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기한 내 표결 처리 해야 한다는 여론과 기한을 넘겨도 합의해야 한다는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합의하는 정당들 간에 기한 내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45.9%로 집계됐다.

'기한을 넘기더라도 반대하는 정당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42.0%였다. '기한 내 표결처리' 응답과 '기한 넘겨도 합의처리' 응답의 격차가 3.9%p

오차범위(±4.4%p)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12.1%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한 내 표결처리' 여론은 호남과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PK), 30대와 40대, 진보층과 중도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반면 '기한 넘겨도 합의처리' 여론은 대구·경북(TK)과 충청권, 60대 이상, 보수층, 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대다수이거나 절반 이상이었다.

지역으로는 서울, 연령별로는 20대와 50대에서는 '합의·표결처리' 양론이 팽팽했다. '기한 내 표결처리' 응답은 광주·전라(기한 내 표결처리 61.6% vs 기한 넘겨도 합의처리 29.4%)와

경기·인천(49.8% vs 37.8%), 부산·울산·경남(44.0% vs 38.5%), 30대(54.9% vs 33.4%)와 40대(53.3% vs 37.1%)에서 다수였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74.4% vs 19.7%)과 중도층(49.2% vs 40.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6.0% vs 9.2%)에서도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반면 '기한 넘겨도 합의처리' 응답은 대구·경북(기한 내 표결처리 32.5% vs 기한 넘겨도 합의처리 53.3%)과 대전·세종·충청(38.8% vs 52.7%), 60대 이상(37.9% vs 50.2%), 보수층(16.3% vs 70.1%), 자유한국당 지지층(9.6% vs 72.2%)과 무당층(11.8% vs 62.5%)에서 대다수이거나 절반 이상이었다.

서울(기한 내 표결처리 44.4% vs 기한 넘겨도 합의처리 45.9%)과 20대(38.0% vs 40.6%), 50대(48.6% vs 44.2%)에서는 '합의·표결처리' 양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선·유선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뉴스1

## 황교안 찾은 심상정 “황제단식 비판한 건 정치적 비판”

심상정 “황교안, 기력이 없어 얼굴만 보고 나와”  
박대출 “사람 생명 소중한데 정치적 비판 대상이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 단식농성 천막에서 8일째 단식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7일 단식투쟁 8일째에 접어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찾았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황 대표가 단식중인 청와대 사람체 인근 텐트를 방문했다. 심 대표는 황 대표와 3분여 짧은 만남을 가졌다. 심 대표가 황 대표의 단식 텐트로 발

걸음을 옮기자 황 대표 지지자들은 “심상정 물러가라”고 외치는 등 반발했다.

심 대표는 황 대표와 비공개 만남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가 주무셔서 얼굴만 보고 나왔다”며 “기력이 없어 주무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황 대표 단식을 두고 ‘황제 단식’이라고 비판했던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비판은 비판이고 (황 대표가) 단식으로 고생하고 계시기 때문에 찾아보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심 대표가 들어가기 전 김도읍 비서실장과 만나 (심 대표에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황제단식) 하면 안된다. 아무리 우리나라 정치가 수준 이하로 떨어졌어도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 하지 않느냐’는 등 단식을 비하·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에 대해 김 실장이 강력하게 말했다”고 전했다.

박대출 의원은 “사람의 생명 소중한데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 되겠느냐”며 심 대표를 비판했다.

## 이인영 “‘250+50석안’?...양보하거나 절충 여지 만들어야”

강제표결 가능성 질문에 “끝내 합의안되면 국회법 따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절충안 도출 가능성을 열어뒀다.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꺾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길 바라면서 “(강제표결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 원안인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안 외에 '250+50석'안 등 절충안이 부상하고 있는 데 대해 “(정당들이 서로 양보하거나 이해관계를 절충할 것은 절충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만들어야 협상이 가능하고 궁극적인 합의로 나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원안만을 고집하지 않고 각 정당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명분에서 수정안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240석이다 250석이다 이런 것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로 나오고 있지만 중

요한 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당이 반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다만 '250+50석'안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비례) 세 석을 늘리려고 ‘동물 국회’가 되고 1년 이상 격렬한 대립을 해야 했느냐는 말을 여당에 드린 바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서로 함께했던 공조의 정신에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언급,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이 주장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의원정수 확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의 문은 닫혔다고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어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고 그것을 명분으로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혁 개혁과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에서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



다.

한국당과 끝까지 협상해 합의처리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표결 처리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국당과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강제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끝내 협상과 합의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하는 선거제도의 개혁과 검찰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다만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끝까지 협상을 통해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1

## 원희룡 제주지사 “문제인 대통령은 ‘남자 박근혜’ 같아”

소수 측근에 둘러싸여 있고 비선실세에 힘 실어줘

원희룡 제주지사가 “문제인 대통령은 ‘남자 박근혜’ 같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27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토론회에서 “문 대통령은 서면보고와 전화로 지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소수 측근에 둘러싸여 비활적으로 나서려 하지 않는 점도 박근혜와 닮은 점”이라며 “조국 등 비선 실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하고, 퇴근하면 관저에서 ‘혼밥’ 하는 것과 자신은 잘하고 있는데 비난을 받아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시금 눈망울과 인자한 시아버지 같은 미소로 국민들에게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잘 경청하는 것 같지만 안보, 경제, 검찰, 사법 등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고집이 세 말을 듣지 않는 것 같다”며 “하나의 진영, 이익집단, 정치적 이익 공동체가 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